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1卷(2), 2008. 8, pp. 49~70
©韓國職業能力開發院

청년무업자의 원활한 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을 위한
영국 고등단계 직업교육제도 분석 및 시사점

이 은 정*

본 연구는 취업도 진학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무업자(NEET)**의 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영국의 고등단계 직업교육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은 직업교육 진입부터 근로이행의 전 과정에서 직업교육과 더불어 고용, 복지 요소들을 연계하여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으로 변혁시켜 왔다. 전체 학교체계를 유연화 함으로써 다양한 직업교육경로를 제공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인 FE컬리지도 유기적으로 변화시켜 입학자격을 유연화 하고 청년무업자 조기발굴체계와 인센티브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업교육 참여를 유도하였다. 동시에 교과과정, 현장교육, 자격제도에 고용연계적 요소를 강화하고 구직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이행을 순조롭게 돕고 있다. 청년무업자에 대한 정책 고려가 시급한 우리 상황에서 한두 가지 개혁 요소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설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청년무업자(NEET), 고등직업교육, 직업교육 진입, 근로이행

투고일: 2008년 6월 30일, 심사일: 7월 22일, 게재확정일: 8월 18일

* 단국대학교 전임강사 (ejlee@dankook.ac.kr)

**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서 우리말로 청년무업자 혹은 청년니트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남재량, 2006; 김기현, 2005).

I. 서론

최근 청년 고용문제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구직을 아예 단념하고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5~34세 청년무업자 수가 약 31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4년 현재 약 80만 명(통계청, 각년도)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점차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남재량, 2006; 이부형, 2005; 노동부, 2008). 하지만 기존의 실업청소년 대상의 입직 위주의 고용정책이나 공공고용안정기관과 직업상담원을 늘이는 단편적인 고용지원서비스로는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청년무업자를 포괄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김기현, 2005; 남재량, 2006). 또한 단순한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직업능력이 미약한 청소년 특성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근로에 처해 결국 자원의 낭비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실상 청년무업자들은 구직을 포기한 비자발적인 실망실업자들로 노동시장이나 교육에서 배제가 지속되면 개인의 생애소득 감소와 노동투입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다 특화된 정책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미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청년노동시장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청년무업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OECD, 2000a; 노동부, 2008). 특히 성공적인 일자리를 돕기 위해 기존의 단기 실업대책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직업준비를 돕는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외된 청소년의 직업교육 진입부터 근로이행까지 전 과정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먼저, 직업교육 진입 측면에서 일찍이 1980년 이래 서구 선진국들은 엘리트 중심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엄격히 제한하던 정책에서 정규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수립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구조를 유연화 하는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옵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이무근, 1993). 하지만 다양한 직업교육경로에도 불구하고 학습동기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져 누락되기 쉬운 취약청소년들이 부각되자 진입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춰 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이나 취업을 저해하는 경제·주거·육아 등의 요인에 대응하고자 국가차원의 교육인센티브와 상담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OECD, 2000b). 그런데 이러한 직업교육의 진입 보장 조치만으로는 고용보장으로 직결되지 않자, 각국들은 직업교육에서의 고용연계 전략에도 초점을 두고 대대적인 직업교육개혁 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경험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교과과정으로 재구성하며, 고용주의 직업교육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쓸모 있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변혁시키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부분적이나마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0a).

반면 한국은 직업교육이나 실업대책은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무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낮은 청년실업을 통계가 청년노동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은 아직까지 일반대학의 대안 경로로 인식될 뿐 학교체계 간 경직된 구조로 직업교육 옵션도 다양하지 않아 직업교육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인문위주의 교과과정이나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유인장치 미흡으로 현장수요를 반영하는 직업능력을 길러주는 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이정표·백형찬·정결채, 2003). 이렇듯 전문대학 진입의 제도적 경직성과 산업체와 동떨어진 교육내용이 맞물리면서 청소년의 직업교육으로의 진입과 근로이행 모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각국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채창균 외, 2002) 유희화 되는 청년무업자를 줄이기 위해 직업교육과 더불어 고용연계, 복지서비스 등의 관련 제 요소를 종합하여 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공통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오랫동안 심각한 청소년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경험한 영국의 경우,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청년무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정책적으로 주목하면서 고등단계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직업교육 기회 보장뿐만 아니라 교육결과와 고용이 밀접히 연계되도록 청소년들을 둘러싼 정책과 학교체계, 고등단계 직업교육제도 및 지원 장치에 대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변혁을 수행하였다(OECD, 2000b). 그 결과 청년무업자의 배제를 줄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무업자의 직업교육과 근로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영국의 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과 관련한 정책, 학교체계 그리고 고등단계 직업교육제도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실현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 보장에 대한 이해

1. 청년무업자(NEET)의 개념

청년무업자를 둘러싼 논의는 최근 들어 학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Social Exclusion Unit, 1999; 강영배, 2001; 남재량, 2006; 김기현, 2005). 이들은 진학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실업자와는 달리 일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자들로 근로생애 진입 초기에 노동시장이나 교육훈련에서 배제되어 유휴화 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무업자의 등장 원인은 고용진입에 걸리는 기간 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EGRIS, 2001). 길어진 교육기간,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관행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생활스타일 등으로 청소년의 근로이행은 예전보다 순조롭지 못하다. 즉, 청소년들이 단기간 장기간 실업과 취업, 무업을 반복하는 요요(yo-yo)형의 이행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최소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무업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방하고 미래의 직업준비를 돕는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청년무업자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지만 청년무업자에 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무업자란 '니트(NEET)'로 불린다. 니트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줄인 것으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1999년 영국에서 유래되었다(Social Exclusion Unit, 1999). 일본에서는 이를 15~34세 연령으로 확대하여 2004년부터 공식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무업자'라고 부른다(김기현, 2005; 강영배, 2001). 이 때 '무업'이라 함은 일하지 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로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4년 후생노동성에서 발간한 노동경제백서

에서 청년무업자(니트)는 '비노동력인구(취업자 및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중 15~34세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내각부 연구회는 청년무업자(니트)를 ① 고교 및 대학 등의 학교, 예비고(입시학원), 전수학교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이며, ③ 평소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황순길·여인중, 2005).

이렇듯 청년무업자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청년무업자의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김기현, 2005). 또한 청년무업자의 규모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되는데, 예컨대 지난 1주간의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평상상태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이들의 규모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니트에 대한 정의에 추가하여 니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보기도 하는데 결국 취업 희망자는 적어도 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 비희망자와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취업 비희망자를 니트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무업자란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한다.

2. 직업교육 진입 보장

직업교육의 기회 보장에 대한 논의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이행 형태 변화와 관련된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장기화된 경제불황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마치거나 특히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없이 중도탈락한 10대 후반 청소년 실업률이 급증하자 각국마다 청소년의 취업능력 제고가 주요 정책 과제로 등장하였다(OECD, 2000a). 따라서 세계 각국은 '신직업주의'¹⁾ 패러다임을 택하면서 국가수준의 대대적인 직업교육 개혁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세팅에서의 직업준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직업세계에 청소년들을 준비시키는 학교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직업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인문교과의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하였다. 영국, 미국 등지에서 20세기 초부터 2차대전 이후까지 인문교육지향 대 직업교육지향의 이념적 대립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는 중등교육의 성격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김미란, 2005).

직업교육으로의 진입(entry to vocational education)은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자들이 원활하게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직업교육으로의 진입은 청소년의 이행과 관련한 경로설계와 함께 다루어지는데(OECD, 2000a; 이정표·백형찬·정결채, 2003),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으로 진입, 직업교육에서 계속교육기관으로 이행, 직업교육에서 근로로의 이행 등으로 구분되는 일련의 경로 가운데 하나의 경로로서 직업교육 진입이 이해되고 있다(이정표·백형찬·정결채, 2003).

직업교육으로의 진입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학교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맥락이 직업교육 진입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중등단계에서 직업교육 이수 이후, 고등단계 직업교육 경로가 마련되지 않거나 중등단계에서 인문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고등단계 직업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등 교육경로 간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구조는 직업교육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무근, 1993). 이에 서구 유럽국가들은 1980년대 이래 기회가 제한되었던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별도의 고등단계 직업교육 경로를 마련하여 직업교육 기회를 넓혀 주고 있다.

한편 학력조건이나 학업성취 같은 입학자격 요건도 주로 학교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Cross, 1981). 이에 서구 유럽국가들은 오랫동안 엘리트 위주로 고등교육 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에서(정일용, 2003)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자격요건을 개방하는 추세이다. 결국 이 같은 조치들은 전체 고등교육 정원 가운데 1/3 이상이 일반대학 외 직업교육대학에 등록하여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0a).

그러나 이러한 학교제도 변혁만으로는 학습동기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포괄하는 데 실효성을 거두기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국마다 보다 적극적인 취약청소년 발굴시스템과 조기개입을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훈련, 근로에 대한 기회 보장을 강조하는 청년보장을 표방하면서 조기 학교중단자나 실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게 긴밀히 모니터하고 직업교육훈련으로 진입하도록 조기발굴과 개입을 위한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OECD, 2000b). 특히 덴마크의 경우, 학교중단자나 안정된 근로상태를 찾는 데 실패한 20세 이하 청소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추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덴마크는 1995년 기준 15개국 비교연구에서 15~19세 청년무업자 비율이 가장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OECD, 2000b). 이러한 노르딕 국가의 청소년 안전망 전략들은 유럽고용전략 위원회(European Committee)에서

도 회원국들에게 채택할 만한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청년무업자가 제도에서 누락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적 상황 요인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취약 청소년들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근로나 육아나 주거 문제 등이 직업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IRIS, 2001). 그래서 각국들은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방애 요인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정보상담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추세이다. 핀란드와 영국은 근로청소년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휴가제도를 보장하고, 노르딕 국가들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18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에게는 소득보조자격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비, 육아 및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교육 진입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청년무업자의 직업교육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제와 입학제도를 포함하는 교육제도 요소와 개별 취약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와 상담서비스의 지원 장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직업교육에서 근로이행 보장

청년기는 학교체제에서 직업세계로 근로생애의 진입을 처음으로 결정하는 시점으로(이정표·백형찬·정결채, 2003) 이후 미래 직업전망에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첫 진입을 순조롭게 돕기 위한 방안들이 중요해진다. 특히 근로이행 성과는 학교에서의 커리어 교육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 고용을 연계시켜 효과를 높여려는 정책 모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학업에서 근로로의 이행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데 ‘학교에서 근로로의 이행(school-to-work)’이란,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풀타임의 안정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Ryan, 2001; OECD, 2000a). 여기서 노동시장 진입은 종전의 명백한 중단 시점이 있는 이행보다는 취업과 실업, 무업을 반복하는 청년 이행 특성상 보다 안정된 근로상태를 강조한다(김기현, 2005). 또한 학교에서 근로로의 이행은 교육과 직업세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고용지원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장원섭 외, 1999). 결국 학교에서 근로로의 이행은 단편적으로 고용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과 교육의 연계를 위해 관련된 제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되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근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면, 크게 직업교육에서

의 고용연계 요인과 지원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직업교육에서의 교과과정은 표준화되고 특화된 직업자격을 많이 제공할수록 고용주가 직원채용 시 근속기간 및 경력 보다는 교육자격에 더 의존한다고 보고된다(Müller & Gangl, 2003). 이는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과 이와 연계된 직업자격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준다. 더불어 산업체 수요만큼 직업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의 수요와 수준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방식은 직업교육 성과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0a). 대표적으로 모듈(module)방식은 청소년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별화 된 교과과정을 구성할 수 있고,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학습루트를 구성할 수 있어 직업교육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표·백형찬·정결채, 2003). 더욱이 종전의 획일적인 교과방식에 비해 중도탈락이 비완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모듈을 완수하면 언제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부분적인 교과과정만 이수해도 이전에 이수한 교과과정을 잃지 않아 계속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현재 일본의 전문학교, 캐나다 지역사회대학, 호주의 기술대학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OECD, 2000b).

한편 직업교육의 강점은 인문교육과 달리 학교에서의 학습경험이나 활동(과정)이 산업 현장의 일(결과)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는 현장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이행 성과를 높이는 점이다. 현장교육은 '일과 학습의 연계' 혹은 '생산을 통한 학습' 등의 직업교육 이념을 근간으로 직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습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일하거나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고용과 고용유지에 효과성을 크게 제고시켜 주고 있다고 나타났다.

무엇보다 직업교육에서 고용연계 성과들을 입증하는 방안은 교육이수 결과에 대한 직업능력을 보장해 주는 일이 가장 명확할 것이다. 교육이수 결과에 대한 질 보장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활성화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각국마다 국가차원에서 정규학교교육에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고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학교-직업 이행 관련 국가비교연구 결과, 직업교육자격이 야말로 의심할 여지없이 청소년들의 개별 구직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지적되고 있다(Müller & Gangl, 2003).

한편 직업교육 이수 후 이행 시점에 취업을 돕는 구직지원서비스와 진로선택을 돕는 진로상담서비스 개발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OECD 국가들은 졸업 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조직화된 직업배치와 구직지원서비스(follow-up)를 제공하고 있다(OECD, 2000a). 학교와 고용주 간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용주가 원할

때 비공식적으로 학교에 연락하는 방식이 보편적인 반면, 일본처럼 학교추천제와 같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사례도 있다. 더 나아가 호주의 경우는 Job Pathways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졸업생을 위한 직업배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학교에 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더 불어 청소년의 이행이 과거의 미리 정해진 경로나 단일 출구 경로였던 것과 달리 점점 상호연계된 복잡한 경로가 변화함에 따라 직업교육 이수 후에도 취업, 계속교육훈련, 일과 교육의 병행 등의 다양한 옵션 중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만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은 진로선택을 할 경우 중도탈락하기 쉽고, 다시 다른 경로로 재진입할 경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마다 청소년 이행 정책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정보제공과 상담가이드 서비스는 중요한 교육개혁의 일부이자 장기실업 및 배제위험을 지닌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조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IRIS, 2001).

이상에서 청년무업자들이 직업교육 진입 후 근로로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서의 고용연계적 요소와 근로이행에서의 지원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계한 정책모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근로로의 이행을 분석함에 있어, 직업교육의 교과과정, 운영방식, 현장교육, 졸업제도 그리고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Ⅲ. 영국의 고등단계 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 분석

1. 직업교육 및 근로이행 정책

영국에서 청소년의 학교교육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초 오일 쇼크로 청소년 실업이 급증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정책의 초점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아무런 자격증 없이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16~18세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 진입경로를 다양화하고,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근로로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꾸준한 개혁을 시행하여 왔다.

먼저 영국의 교육개혁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 이래 학교교육에 직업교육을 제공

하도록 변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974년에 16~18세 청소년이나 성인을 위해 지방정부 산하에 설립하였던 계속교육기관에 직업자격증 과정을 개설하면서 학교교육에 직업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그리고 1988년에는 국가차원의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교육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인문교육이나 직업교육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해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다. 1992년에는 계속고등교육법(Further Education Act)을 제정하여 과거 민간운영의 계속교육기관을 공립화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다양한 고등단계 직업교육 경로를 갖추도록 변혁시킨다. 더불어 3~4년제 종합기술직업교육을 제공하던 폴리테크닉을 대학으로 승격시켜 직업교육에서도 학위수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게 된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직업교육과 고용이 직결될 수 있도록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의 노동시장 요소 도입에도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먼저 청소년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고용으로까지 연결되도록 1982년 '기술직업교육계획(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Initiative)'을 수립하고 산업계를 참여시켜 직업기초기술 및 현장교육이 강화된 직업교과과정계획을 마련하였다(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 1994). 그리고 1988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계의 요구와 지역사정이 직업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대표로 구성된 훈련기업협의회(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 2001년 학습기술협회로 개편)를 설립함으로써 표준화한 직무기준을 근거로 직업교육과정 개발과 평가에 참여하고, 현장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직업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직업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이수 후 고용으로 직결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노동시장이나 교육에서의 배제가능성이 높은 취약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주목하면서 개별화된 인센티브와 상담서비스 조치를 강화한다. 먼저 청소년의 학업 중단 및 직업교육 기회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에는 '새천년 계속교육정책(Further Education for the New Millennium)'을 통해 16~18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계속교육유지수당을 제공하여 계속교육 참여를 장려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교육훈련을 위한 휴가에 대한 권리(Right to Time Off Study or Training)'를 규정하여 자격이나 기술이 없는 16, 17세의 근로청소년에게 근무시간 중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2001년에는 학습동기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낮아 제도권에서 누락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outreach)하기 위해 학교와 대학 등 청소년 관련 모든 기관에 개별상담가를 배치하는 '연계파트너십(Connexion Partnership)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누락된 취약청소년의 조기발굴을 촉진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이러한 개별상

담가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존의 진로서비스센터의 업무를 발전시켜 13~19세 모든 청소년에게 고용, 교육, 훈련에 대한 진로상담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 이수생들에게는 학교와 구직센터(job centre)와 연계 후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로이행을 돕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 변혁을 통해 지역특성에 따른 청소년 고용의 종합적인 계획과 통합적인 전달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교육체계

영국의 교육체계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5~11세의 초등교육, 11~16세의 중등교육, 16~18세의 계속교육, 그리고 18세 이후 고등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은 5세부터 16세까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 이후에도 19세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직업교육은 주로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진다. 계속교육은 우리나라에 없는 영국의 독특한 교육체계로 의무교육 연한인 16세 이후 대학진학준비나 직업자격 취득을 위해 제공되는 단계이다. 16세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대학진학반 및 대학진학전문대학(sixth form colleges & six form colleges), 고등전문학교(tertiary colleges), FE컬리지(further education colleges), 폴리테크닉(polytechnics)이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첫 번째 경로는 대학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대학진학반 혹은 대학진학전문대학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문계 고교와 유사한 경로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16~18세의 전일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데, 여기에도 최근 직업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1973년 21개교에서 1996년 110개교로 크게 늘어났다.

두 번째 경로는 대학진학 준비과정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고등전문학교이다. 이 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능력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직업교육 및 인문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16~18세의 학생들과 성인들을 주 대상으로 전일제(full-time)와 시간제(part-time) 학생을 포함하여 수천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1994년 현재 잉글랜드에 51개, 웨일즈에 7개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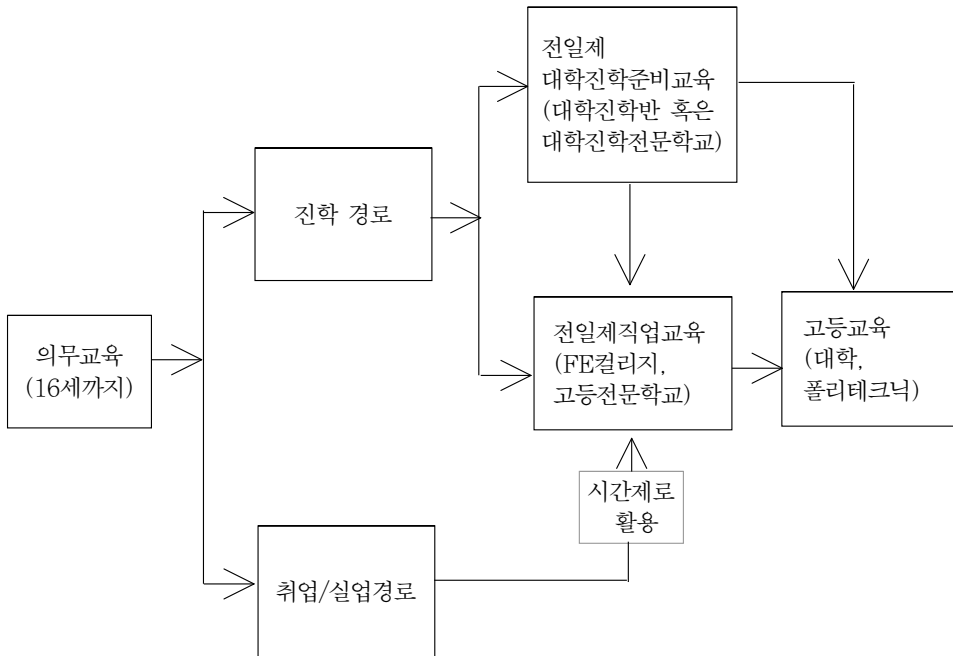
세 번째 경로는 FE컬리지로 직업교육은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FE컬리지는 전문 기술인의 양성을 목표로 직업자격증과 일반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16~18세 전일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곳이다. FE컬리지 진학생들은 자격증을 얻어 취업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부분으로, 현재 영국에는 약 330개의 계속교육기관이 있다. FE컬리지는 크게 통합과정의 FE컬리지와 전공별 특화된 농업원예전문대학, 기술전문대학, 예술대학, 상업전문대학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2년 과정으로 전공분야, 교육과정, 운영유형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단계 직업교육경로로는 폴리테크닉이 있다. 폴리테크닉은 FE컬리지와 달리 대학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종합기술전문학교로서 주로 예술 및 경영 등 실용적 고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 잉글랜드에 33개교,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에도 각각 하나씩 학교가 있다. 1992년에 폴리테크닉은 대학으로 개편되어 직업교육의 기초과정부터 학위수여 과정까지 운영하며 교육내용이 보다 세분화되고 심도있게 구성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면 의무교육 이후 제시되는 다양한 교육경로는 청소년들이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등 이후 직업교육경로는 주로 FE컬리지와 폴리테크닉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으나 다른 교육기관들에 진입하더라도 직업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청년의 직업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림 1] 영국의 직업교육 접근경로의 다양성



3. 영국의 FE컬리지

가. 입학제도

먼저 영국은 FE컬리지의 입학자격과 선발방식을 통해 직업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FE컬리지는 직업교육과정과 일반교육과정별로 입학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직업교육과정은 성별·연령·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입학자격이 매우 유연한 것이 특징이다. 그 예로, 대표적인 국가직업자격과정인 직업자격증(NVQ) 과정과 일반자격증(GNVQ) 과정은 특별한 입학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학교중도 탈락자나 중등학력수료증(GCSE)이 없는 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청소년은 공식적인 입학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충분한 현장 경험과 능력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일부 입학자격내용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중등단계 재학생에게는 과정에 따라 중등학력 자격인 1~4개의 표준등급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직업교육의 강화로 중등교육단계에도 일반직업교육자격을 받을 수 있어 중등학교 학생들도 직업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또 다른 FE컬리지의 입학 촉진 기제는 선발방식을 들 수 있는데, 자발적인 응시자를 위한 선발 방식과 학습동기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선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자발적으로 FE컬리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의 경우, 시험이나 입학사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 때 대학에 대한 정보나 응시방법, 전공선택 등은 지역사회 내 진로서비스센터의 진로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취약청소년의 경우 직업교육 동기가 적고 각 시스템에서 누락되기 쉬워 지역사회 내에서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한 발굴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진로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배치된 개별상담가들이 진입구 역할을 하여 가능한 한 모든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고 고용, 교육, 훈련의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기관을 옮겨 다니더라도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결망인 연계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나. 교과과정

FE컬리지의 교과과정은 고용과 직결되도록 꾸준히 고용친화적 요인을 도입하는 데 주

력하고 있다. 먼저 1980년대 중반 이래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각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꾸준히 실시하여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의 새로운 교과를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도단체(lead bodies)를 설립하여 국가직업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직업자격증(NVQ)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단위의 수와 내용, 그리고 단위 간의 결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강좌의 70%를 각 기업체의 혁신사례를 반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E컬리지의 교과과정 개발에 고용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산업체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고용주가 직접 학교직업교육에 참여하거나 현장교육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교육과정 개발을 산업체가 주도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기업훈련협회 기구를 설립하여 보다 조직화하며 2001년에 학습기술협회로 개편하면서 학교와 고용주 간의 현장교육과 산업체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은 개인의 능력과 욕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직업교과과정은 일찍부터 등급화 하여 기초직업자격과정과 전문직업자격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수준별 직업기초능력과 전문능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교과는 흥미를 떨어뜨려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FE컬리지의 교과과정 중 취업능력이 취약한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격제도는 일반직업자격과정(GNVQ)인데 직업공통직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직업과정에 일반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2000년 9월에는 GNVQ에 통합되어 있던 직업기초능력을 분리시켜 '직업기초능력자격(Key Skill Qualification, KSQ)'을 도입하면서 직업기초능력 구축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 수리적용능력, 정보기술의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수준 1, 2, 3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직업기초능력을 이수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은 모듈식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과 속도에 따라 자기주도적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산업계의 변화나 새로운 직업세계의 교육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영국에서 청소년들이 일반직업자격(GNVQ)을 취득하려면 각 단계마다 도달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여 과목선택이 이루어지며, 상급으로 갈수록 과목 수가 더욱 많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직업교육과정(NVQ)도 마찬가지로 작은 단위의 모듈 형식으로 필수 단위, 선택단위, 부가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다. 현장교육

직업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체 현장에서 쓸모있는 직무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영국 FE컬리지에서는 학교에서의 경험을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중시하여 운영실태, 기간, 평가 요소를 변형시키고 있다. 먼저 FE컬리지의 현장교육 운영은 교육내용과 방법과 기간 등 주요 사항 결정 시 기업과 학교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현장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 고용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인 학습기술협의회가 학교와 고용주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습기술협의회는 학교와 학생들에게는 노동시장 지식과 기업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업에게는 단순히 재정보조나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기간, 평가방법 등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기업과 학교 간 신뢰를 높이고, 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현장교육 기간은 자격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업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직업관련 이론과 실습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GNVQ 중급단계에서는 1년간 주1회 현장실습을, 상급단계에서는 2년 동안 4주(주 10~18시간)의 현장실습을 완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실습경험은 학생들에게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일하거나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현장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담당교수를 배치하여 관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FE컬리지의 교수진 구성을 보면 교수(teaching)활동을 하는 교수와 자격인정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평가교수로 구분되어 있다. 물론 대학마다 그 비율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자격인정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수는 산업체 내에 평가자 자격을 갖춘 동료나 상사가 없을 때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습자의 평가와 진로지도를 전담한다. 주로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현장학습장에서 학생과 평가교수가 만나며, 이 때 고용주도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평가교수는 정기적으로 현장학습의 진전 정도를 검토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자격제도

직업교육과정과 국가자격제도를 연계하는 영국의 직업교육체계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FE컬리지에서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므로 주로 자격증 시험이 교수이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FE컬리지의 직업교육과정 평가제도를 살펴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자격증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격증은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해 주어진다. 단순히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해서 그냥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 결과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질 보장을 통해 근로이행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자격취득과정은 일련의 단위 과제를 이수함으로써 시작된다. 만일 특정 단위 과제에 관한 시험에서 낙방할 경우, 시험 전체를 다시 치르지 않고 그 단위 과제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직업자격과정은 자격증 종류에 따라 일반직업자격과정과 직업자격과정 간 평가검증체계가 다소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일반자격증과정(GNVQ)에 대한 평가방식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이루어지며, 그 비율이 30대 70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내부 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의 일환으로 교사 혹은 교육훈련강사에 의해 교육기관 내에서 행해지며, 주로 학생의 교육과정 중 프로젝트 수행과 개인과제, 역할극 등의 포트폴리오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외부평가는 독립적인 외부 검정기관의 외부평가자에 의해서 주로 일반자격증과정의 각 단위에 대한 평가로, 등급이 매겨지는 시험, 필기 또는 실기, 구술시험, 일련의 과제 등이 시행된다.

직업자격과정(NVQ)에 대한 평가는 주로 직무능력에 대한 작업장(혹은 모의 생산현장) 또는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각 단위의 성취목표에 도달했는지와 단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QCA, 2003). 신청자는 해당 직업분야와 등급의 직업자격을 위하여 요구되는 단위를 모두 취득해야 하며, 직업자격증 단위 평가방법으로는 사전학습에 대한 인정, 수행작업에 대한 평가, 각종 프로그램에의 참여 결과 등과 함께 필기 및 실기시험의 결과 등이 활용되고 있다. 주로 직업자격증과정의 평가는 작업현장에서 평가자 자격을 취득한 동료나 상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가는 직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평가신청자가 평가척도에 맞게 작성한 포트폴리오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 인센티브 및 상담서비스

영국의 경우, FE컬리지로의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고 취약한 청년무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인센티브와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재정적 인센티브로 직업교육을 받는 16~18세의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학비를 면제함으로써 직업교육 진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원, 2000). 또한 학습자지원금제도(Learner Support Fund's), 주거비용지원제도(Residential Bursary Scheme), 육아비용지원제도, 교육유지수당(Educational Maintenance Allowances) 등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업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근로청소년의 경우, 과거 16~18세의 시간제로 FE컬리지를 다니거나 19세 이상이 되면 소속 직장이나 학생본인이 세금감면을 통해 총 학비 중에서 75% 정도는 납부하였는데 최근 시간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고 수업료의 25%만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 다른 FE컬리지로의 진입 지원 조치로는 1999년에 자격이나 기술이 없는 16, 17세의 근로청소년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휴가에 대한 권리(Right to Time Off Study or Training)'를 규정하였다. 이는 근무시간 중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휴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 외 근로자를 위한 연수휴가제(day release)와 직무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block release)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직업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이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직지원 조치로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근로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직지원서비스와 진로상담서비스 등 개별화된 집중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와 1,000여 곳의 구직센터가 긴밀한 협력하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연계서비스 기구를 통해 직업교육 이수 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취업 알선 및 진로상담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영국은 직업교육 진입과 근로이행을 촉진하는 기제를 꾸준히 변화시킨 결과, 여전히 어려운 청년노동시장 상황에서 부분적이거나 교육참여와 근로이행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고등단계 직업교육 진입 측면에서, 16~17세 청소년의 풀타임 교육참여율은 1997년 70%에서 2006년 75%로 증가하였다(ONS, 2005; Connexions, 2005). 특히 16~19세 청소년 가운데 FE컬리지에 등록하는 비율이 1980년대 초반 1/3수준에서 2000년 현재 거의 3/4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OECD, 2001). 더욱이 1998년 기준 전체 FE컬리지 재학생 약 4백만 명 중 풀타임 학생의 약 70%가 16~19세 청소년으로 나타났고, 24세 이하 근로청소년도 시간제 학생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E컬리지가 공립화 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참여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Kennedy, 1998). 이러한 점에 견주어 볼 때, 직업교육 진입 기제들의 변혁은 노동시장이나 교육에서 누락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참여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근로이행 성과는 직업교육 참여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격증 취득률과 계속교육 참여율 등 장기적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먼저 FE컬리지 학생의 자격증 취득률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직업자격 취득자 현황은 1995년의 경우 직업자격증(NVQ) 수준 3 이상의 취득자 수는 약 23만 명에서 1998년에는 약 27만 명으로 약 17%가 증가하였고, 일반직업자격증(GNVQ) 취득자는 1995년 약 78만 명에서 1998년에는 1백만 명으로 약 2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FEFC, 1995). 이러한 직업자격증(NVQ)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의 약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률에도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Frankel & Reeves, 1996). 한편 직업교육이수생의 상급단계의 계속교육으로 진학률도 높아졌는데, 1999년 대학신입생 중 40%는 GNVQ, NVQ 등의 직업자격 취득자로 직업교육을 통한 상급교육기관으로의 계속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IV. 영국 고등단계 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의 시사점

청년무업자의 원활한 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을 위한 영국의 제도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영국은 일찍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 정책의 변혁을 통해 학교체계를 재편하고, 이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전략을 꾸준히 발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국의 청년무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적 예방 관점에서 직업교육 진입부터 근로이행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교육과 더불어 고용, 복지의 모든 관련 요소들을 연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취한

점이다. 복합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년무업자들은 직업교육이나 실업대책의 단일 정책 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청년무업자 대응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영국이 청년무업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직업교육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하여 교육구조 유연화 방향으로 변혁시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전히 한국은 교육접근경로가 제한되고 각 교육기관 진입구가 경직되어 진학, 계속교육,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로도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개별 교육기관 중심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경로 간 유연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국의 국가차원의 직업자격제도 정비와 교육과의 연계와 같은 지원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동기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년무업자의 직업교육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중요한 작용기제일 것이다. 각국마다 청소년 이행 정책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 및 배제위험을 지닌 청년의 보고의무화 및 조기발굴체계, 개별화 된 지원과 상담서비스 등은 중요한 교육개혁의 일부이자 노동시장 조치로 공통적이라는 점에서(IRIS, 2001) 정책설계 시 우리가 도입할 만한 핵심요소로 지적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FE컬리지에서의 교육이 고용과 직결될 수 있도록 산업체가 학교교육 전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 영국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유명무실한 직업교육훈련심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수요와 수준에 따라 과정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듈방식이나 교육이수에 대한 자격증과 같은 질 보장 검증체계도 근로이행 성과에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와 진로지도센터, 고용사무소 간의 협력 하에 지역단위의 취업알선 및 진로지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고려할 만한 방안일 것이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와 성공적인 일자리를 위해 '일과 학습'의 병행이 요구되는 시대에 아직 직업교육에 대한 위상이 낮은 한국 실정에서 직업교육의 한두 가지 개혁 요소만을 도입하여 변화를 꾀하는 형식적인 틀 갖추기 방식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무업자들의 배제를 방지하지 위해 직업교육 및 근로이행 정책, 학교체계, 고등직업교육기관 등 관련 제도 및 지원 장치들 간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성원(2000). 「21세기 전문대학의 발전 방향」, 『전문대학교육』, 제32권, 4~18쪽,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강영배(2001). 「일본 청소년의 이행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일본연구』, 제9집, 1~28쪽, 명지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
- 김기현(2005). 「니트(NEET): 일본 청년무업자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제3권 제5호, 55~63쪽, 한국노동연구원.
- 김미란(2005). 「청소년 이행의 관점에서 본 직업교육정책의 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2008). 『한국형 니트(NEET)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 경제학적 고찰』, 노동부.
-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1994).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이무근(1993).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 이부형(2005). 「한국도 NEET족이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 이정표 · 백형찬 · 정걸채(2003). 『전환기의 직업교육체제 재정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원섭 외(1999). 「모스트모던시대의 직업교육 재개념화」,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2권 제2호, 1~28쪽, 한국성인교육학회.
- 정일용(2003). 「영국의 직업교육 동향」, 『직업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199~213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채창관 외(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 황순길 · 여인중(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 Cross, K. P.(1981). *Adults as Learners*, CA: Jossey-Bass.
- Connexions(2005). *The Active Involvement of Young People in the Connexion*

- Service: A Practitioners Guide*, UK: Connexions.
- EGRIS(2001). “Misleading Trajectories: Transition Dilemmas of Young Adults in Europe”, *Journal of Youth Studies*, Vol.4 No.1, pp. 101~119.
- FEFC(1995). *How to Apply Finding*, UK: FEFC.
- Frankel, A. & Reeves, F.(1996). *The Further Education Curriculum in England: An Introduction*, Bilston: Bilston College Publications.
- IRIS(2001). *Misleading Trajectories? An Evaluation of the Unintended Effects of Labour Market Integration Policies for Young Adults in Europe*, DE: IRIS.
- Kennedy, M.(1998). “A Pilot System Dynamics Model to Capture and Monitor Quality Issu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xperiences Gained”, Proceedings of 16th International System Dynamics Conference, Quebec, Canada.
- Müller, W. & Gangl, M.(eds.)(2003).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Work in Europe: The Integration of Youth into EU Labour Mark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2000a). *Thematic Review of the Transition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Paris: OECD.
- _____(2000b).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Making Transition Work*, Paris: OECD.
- _____(2001). *Education Policy Analysis*, Paris: OECD.
- ONS(2005). *Social Trend*, UK: ONS.
- QCA(2003). “Finding Your Way Around: A Leaflet about the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UK: QCA.
- Raffe, D.(2003). “Pathways Linking Education and Work: A Review of Concepts, Research, and Policy Debates”, *Journal of Youth Studies*, Vol.6 No.1, pp. 3~19.
- Ryan, P.(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39 No.1, pp. 34~92.
-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 <http://www.dcsf.gov.uk>

abstract

Systemic Analysis of Further Education Colleges for Smoothing
Entry to Vocational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to Work
Transition of the NEET in UK and Its Implications

Lee, Eu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ystemic factors of Further Education Colleges reform in UK for smoothing transitions of the NEET(the youth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focusing on entry to vocational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to work.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olicies on transition of entry to vocational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to work must change to overall and dynamic approaches on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factors related to whole transition processes. Second, education systems need to reform flexible pathways to give diverse learning opportunities for NEET. Finally, admission requirements of FE colleges must be more flexible and actively outreach systems, incentives and guide services have to adopt. In addition, in order to tightly connect education and employment, it is necessary that FE colleges collaborate with industries in a curriculum development and work-based learning.

Keyword: NEET, Higher vocational education, Entry to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to work